다산포럼

선진국 극우정치, 파탄의 한국정치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트럼프 식의 신고립주의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가. 그간의 세계화는 노동의 발은 묶되, 상품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푸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대안은 없다' 류(類)의 구호와 더불어 거침없이 진행돼 왔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는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 현상은, 세계화 흐름을 선도하던 영미자본주의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거기에 제동을 거는 기이한 모양새를 보여준다. 사람들 이동이 난민(refugees)이란 가장 적나라하고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선진국들의 국경을 위협하면서 이주노동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후발 산업국들에게 매력적일 보호무역주의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인 미국에서 먼저 광범위하게 먹히고 있다.

그간 반세계화 외침은 주로 진보 진영의 몫이었다. 가령 피에르 부르디외(1930~2002, 프랑스 사회학자)는 방치된 세계화가 몰고 올 파국을 거대한 유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에 빗댔었고, 폴 크루그먼(1953~, 미국 경제학자)은 세계화시대의 체제경쟁을 '바닥을 향한 편집광적 질주'로 비유하며, 모든 나라가 더 싼 임금, 더 낮은 세금, 더 많은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국가복지와 더불어 보통사람의 삶의 질은 최저 수준으로 수렴하리라 전망했었다. 세계가 40 : 30 : 30에서 20 : 80, 급기야 1 : 99 운운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과 최근의 금융 위기는 이들의 예측을 현실로 뒷받침한다.

진보의 반대에도 까딱하지 않던 세계화가 애초에 그것을 앞장서서 부추겼던 우파 진영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오늘의 역설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정치에서 좌파는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급진적 우익 세력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후자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민주당 계열을 앞질렀고 영국, 덴마크, 프랑스에서는 최다득표를 기록했으며, 오늘날엔 유럽의회 전체 의석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 정치도 다르지 않아 가령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스위스에서 반유럽연합을 표방한 극우정당의 총선득표율은 20%를 상회한다. 브렉시트를 맨 앞에서 선동했던 영국독립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통의 자민당을 제치고 득표율 제3당 지위에 올라섰고, 경제 애국주의를 표방하며 유럽연합 탈퇴를 제1의 공약으로 내건 프랑스 국민전선 마린 르펜은 30%에 육박하는 여론지지율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폐해는 일차로 시장논리를 견제할 지구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제어장치가 부재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세계정부는 없고 IMF나 세계은행 등 경제조직 혹은 유럽연합 등 지역통합체들은 만성적인 민주적 결손에 시달리며, 서유럽과 미국·캐나다의 인구를 다 합쳐도 중국이나 인도 한 나라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구비례 혹은 진정한 의미의 1인 1표 원리가 관철되는-가령 세계의회 같은-민주적 통제장치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다. 원래부터 세계체제란 어떤 외양을 갖든, 강대국 중심의 위계 체제에 불과하기 십상이거니와, 세계화 추세를 제어하고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큰 생산자 집단인 노동이 절차적 평등원리에 의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국가뿐이다.

작금의 우파 포퓰리즘이 주도하는 대서양 양안의 반세계화 흐름이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인종, 종교, 성 등 원천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정체성 정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로의 회귀 조짐이 계급권력의 타협을 전제하는 민주주의의 복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한국은 종교·인종·언어 등 정체성 요인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어쩌면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목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전에, 정치 자체의 파탄이다. 후진적 정당조직/제도, 대표성 취약한 선거제도 등 핵심 쟁점들은 아예 뒷전인데, 배운 사람 천지인 청와대 안팎에선 주술에 취한 듯 거짓과 억지가 버젓이 공론장을 뒤덮어도 그것을 옹위하는 테러에 가까운 말들은 연일 백주를 횡행한다.

채만식의 '탁류'(濁流)에는 3년제 여학교를 마쳤으면서도 남자들에 속고 치이며 애비도 모르는 어린 자식과 친정 식구에 매여 외골수로 인생을 사는 주인공(초봉)이 나온다. 평론가 김윤식은 저자가 '교육이나 교양이 순응과 출세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식민지 교육의 무용성을 지적한다고 말한다. 일제와 거듭된 독재를 거치면서 기왕의 지식 위주 보상체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판검사나 교수가 되기 위한 절차탁마의 세월, 그 농축된 이기심을 단기간에 보상받으려는 기능적 지식인만이 판치는 곳이 한국 사회다. 이 거대한 탁류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민주주의의 실험 속에서 교육받고 자란 세대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큰 이유이다.

청춘 톡·톡

우리는 명태가 아니다

신 태 호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2년

밤 하늘 사이로 보슬보슬, 참 예쁘게도 눈이 내리던 날. 그날의 소주 안주는 동태탕이었다. 며칠 전 광주에 눈이 내렸고, 자연스레 시커먼(?) 청년들이 모였다. 간단히 한 잔 하자던 약속은 늘 그렇듯 소주 한 병이 넘어갈 때 즈음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됐다. 동태탕은 고춧가루로 맛을 낸 생태탕과 다르게 고추장과 된장이 들어간다. 시원하고 얼큰한 생태탕에 비해 약간 텁텁함과 냉동생선 특유의 비릿함도 느껴진다. 그 뒷맛을 잡아주는 게 바로 소주 한 잔이다.

수년 전 겨울, 강원도 산골짜기 친척집에 잠시 머물게 됐던 나는 동태탕을 즐겨 먹었다. 흔한 슈퍼마켓도 없었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냉동실(사실 겨울철 냉동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춥다)에 얼려두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동태였다.

동태(凍太)는 말 그대로 얼린 명태를 뜻한다. 이 명태란 놈은 얼리면 '동태'가 되고, 바람에 바싹 말리면 '북어'가 되고, 반건조를 시키면 '코다리'가 된다.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덕장에서는 명태를 걸어둔 채 일부러 겨울 눈을 맞춰가며 얼렸다가 녹였다를 수차례 반복해가며 햇빛에 말리는데, 이게 노란 빛깔의 '황태'다. 참 이상하게도 명태를 그냥 내버려둬도 명태가 아닌 '생태'(生太·얼리거나 말리지 않고 잡은 그대로의 명태)라 불린다. 이름이 참 많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진 명태란 생선은 애초에 이름조차 없었던 무명(無名)의 생선이었다고 한다. 동해 북쪽 바다에서 차고 넘치게 잡혔던 명태는 예부터 다양한 형태로 즐겨먹던 생선이다. 조선 인조 때쯤 부임한 함경도 관찰사가 명천군(明川郡) 초도순시를 나갔을 때 동네에서 반찬으로 내온 생선이 있었다. 담백하고 맛이 좋아 이름을 물었더니 명천에 사는 태(太)씨 성을 가진 어부가 처음 잡아온 물고기라 하여 명태(明太)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 있다.

고려시대 강원도에서는 명태를 북방 바다에서 온 고기란 뜻의 북어(北魚)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정식 이름은 아니었다. '동태나 북어나'(이것이나 저것이나 매한가지다)라는 속담도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 아무튼, 정식 기록에 '명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 효종 3년 때 '승정원일기'에서라고 한다. 무명(無名)의 물고기라 먹으면 안 된다는 미신 때문에 잡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말도 있다. 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온갖 형태로 즐겨먹던 명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면서도 배고픈 서민들의 유용한 먹을거리가 되어준 고마운 물고기다.

명태도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똑같은 바다를 헤엄치면서도 운이 나빠 누군가에게 잡힐 수도 있고,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 동태가 될지, 생태가 될지, 코다리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명태의 '안쓰러운' 삶이다.

살다 보면 간혹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그어 놓은 기준에 인생을 짜맞추면서 스스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가진 직업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남들의 시선 따위를 두려워할 것도, 그들의 기준에 따를 이유도 없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운명과 이름마저 좌지우지되는 명태와 다르지 않는가. 적어도 동태가 될 것인지, 황태가 될 것인지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 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상생의 노력 필요하다

이 재 창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무등산 정상에 방공포대가 설치된 1966년 이후 50년 만에 공군이 방공포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방공포대가 이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이전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광주시민이라면 지난 50년 동안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맺혀지는 응어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의 진산이라고 외치면서도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도, 자유롭게 오를 수도 없었으니 마음은 있되 정신을 남에게 맡기고 사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무등산 정상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술적으로 700m 이상에 온통 주상절리로 형성된 산도 드물거니와 1187m 정상이 주상절리의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를 통하여 정상에 오른 시민은 두 번 탄식하게 된다고 한다. 한 번은 천왕봉의 머리가 잘려나간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고, 지왕봉 주상절리가 돌이 아닌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것 같은 아름다움에 탄성이 절로 난다고 한다.

무등산 정상은 지질학적으로는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호남정맥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생태학적으로는 아고산대 식생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남도지방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식물들과 생태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지질과 생태학적인 가치가 자원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객관적인 가치가 입증되고 있는 등 지키고 보존해야할 광주시민의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무등산 정상이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애초 공군의 입장은 끄떡도 하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대통령이 당선되면 등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돼 2007년 5월 19일 등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우리 단체가 방공포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즉시는 힘들고 군장비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이전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다. 2010년 이후 정상 개방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자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서 2015년 말 광주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이전 대상지 선정이 끝나면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장비현대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방공포대는 시야확보가 최우선이였으나 전자기기의 발달로 고지대가 아닌 평지에 위치해도 방공망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기술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며 정상은 광주의 심장이요 정수리다.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4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써 광주의 자원이 아닌 국가의 자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더욱이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국가자원이 아닌 세계인의 자산으로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았다.

공군이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전까지는 걸림돌이 공군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의 몫으로 넘어왔다. 광주시민이 50년 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은 광주시민이 풀어야할 난제 중의 하나로 광주시뿐 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첫째, 공군이 이전지로 제시한 송정리 군 공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방공포대는 추적시설과 타격시설로 구분되는데, 이전지에는 타격시설만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드와 같은 전자파 위험이 없고, 주 타격 시설도 이미 대폭 이전되어 광주 방위만을 위한 것이다.

둘째,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의 이전 효과를 냉정히 따져야한다. 무등산이 국립공원,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송정리 KTX환승센터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 효과는 송정리에서 일고 있는 지역상권 뿐만 아니라 광주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방공포대 이전은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인증준비과정에서 예비실사단이 다녀가면서 방공포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본 심사 전에 이전이 보장되어야한다.

무등산 정상의 방공포대 이전이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광산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민의 과업이다.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폭넓은 시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이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우리 보물을 두고도 50년 동안 주인이 주인노릇 하지 못했던 한을 이제 풀어야한다.

社 說

수사 기간 연장 위한 특검법 개정 서둘러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체 규명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이기도 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문고리 3인방' 수사는 손도 못 댔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도 별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새로운 의혹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탄핵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은 이미 약속했던 특검 조사마저 거부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속셈일 것이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이 황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 농단의 공범인 그에게 먹혀들 리 없다. 황 대행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은 오는 25일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구하는 절차 없이 수사를 50일 동안 추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황 대행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여기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황 대행이 승인을 거부하면 공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젊은 여성 일자리 창출해야 지자체 살아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전남 지자체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대형시설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흥군 인구의 경우 2014년 현재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공공자금 166억 원, 민간자금 500억 원 등 666억 원을 투입해 우주랜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월 6만9532명으로 7만명 선이 붕괴된 이후 2016년 6만8516명, 2017년 6만7622명으로 줄어들었다.

소멸 위험도 7위인 신안군 역시 연륙·연도교 설치 사업으로 교통 편의가 향상됐지만 인구는 지난 2004년 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2014년 4만437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39세 여성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전남 지자체가 17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고흥군의 경우 젊은 여성의 비중이 6.7%, 신안군은 6.0%에 불과하다.

오늘날 전남 지자체들의 소멸 위기는 젊은 여성들의 시골 기피 현상과 무관치 않다. 가임기인 20~39세 여성은 결혼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인 만큼 젊은 여성들의 인구가 많아야 지자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공공근로를 통한 고용 창출도 좋지만 젊은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전남을 찾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인구 증가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無 等 鼓

야사리 당산제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주민들은 당산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긴다. 400~500년 전부터 시작된 마을 역사와 함께 해 온 노거수(老巨樹)들이다. 정월대보름 하루 전인 지난 10일 늦은 밤, 매서운 추위와 함께 눈발마저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주민들은 당산제를 거르지 않았다. 야사리 당산제는 세 곳에서 치러졌다. 규남박물관 남쪽 할아버지 당산(느티나무)과 이서 커뮤니티 센터 운동장에 자리한 할머니 당산(느티나무), 개울 옆 500여 년 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3호) 앞에서다.

이 가운데 개울 옆 은행나무는 조선 성종 재위(1469~1494) 때 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로 우는 소리를 내 나라의 불운을 알렸다고 한다. 당산제를 주관한 정기호(78) 전 이장은 "11살 때 은행나무가 슬픈 소리를 냈다. 새가 그런 줄 알고 일부러 석양에 가서 들어 봤다. 마을 사람들이 '괴변이 날런가 보다' 했는데 과연 한국전쟁이 터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설 이전에 총회를 열고 당산제를 지낼 제관 7명을 뽑았다. 제관들 나이대는 40~70대. 제관들은 제를 지내기까지 부정한 일을 삼가고, 상가(喪家)에도 가지 않는다. 마을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 제관들은 제기와 제물을 손수레에 싣고 옮겼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당산제가 끝나면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사용한 제물을 내려놓고 새 것으로 바꿔 담았다. 새 제물로 제상(祭床)을 차리기 위해서다.

당산나무마다 지방도 다르다. 할아버지 당산은 '이사신위'(里社神位), 할머니 당산은 '당산신위'(堂山神位), 은행나무는 '별신지위'(別神之位)라고 쓴다. 축문은 할아버지 당산에서 읽고 난 후 불태운다.

"유세차'(維歲次) 정유년 정월…"로 첫 머리를 시작하는 축문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 주민들의 무병·무탈, 화합을 바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축문 가운데 '어려운 것은 병풍으로 둘러싸버리고'(亂類屛跡), '백가지 복을 향해서 간다'(咸享百福)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한국 민속문화의 정수(精髓)인 당산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강추위 속에서 야사리 당산제를 곁에서 지켜보며 마을과 당산제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래도록 굳건하기를 바랐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